

비용·일정관리 최대 변수… ‘KDDX 공동개발’ 방안 부상

방사청, 방추위서 사업 방식 논의
기본설계 완료 후 후속 사업자 선정
HD현대·한화 공동 시나리오 거론
역할·책임 구분 명확화 핵심 과제
美 해군 LCS·쥘왈트급 사례도 참고

약 7조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공동개발 방안이 주요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단일 국가 내 복수 조선소 참여 방식이 해외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난항을 겪은 전례가 있어,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오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논의한다. 방추위에는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계약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업계에서는 공동개발 방안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KDDX는 해군의 차세대 주력 수상 전투함으로, 노후 구축함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되는 대형 국책 방산 사업이다.



KDDX 조감도.

/HD현대중공업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까지 포함하는 장기 사업으로 해군의 대공·대잠·대함 작전 능력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된다.

현재 공동개발 방안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기존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방식 모두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KDDX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행했으며, 기존 방산 관행대로라면 기본설계 수행 업체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후속 단계를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이

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군사기밀 유출 전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 수의계약 방식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방사청 안팎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개발 방식이 주요 선택지로 검토되고 있다. 공동개발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이나 패자 불복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설계 권한과 책임 범위 설정, 비용증가, 일정 지연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실제 해외 사례를 보면 미 해군은 2000년대 초반 약 280억 달러(약 33조 원)를 투입해 3000톤급 연안전투함(LCS)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되자, 경험하던 두 업체를 모두 선정해 두 가지 설계를 병행 개발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프리덤급(LCS-1)과 인디펜던스급(LCS-2) 두 모델이 개발돼 실전 배치됐지만, 이후 운용 과정에서 상호 운용성과 작전 효율성 측면의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유지·정비 체계가 이원화되면서 비용 부담도 커졌고, 당초 52척으로 계획했던 건조 물량 역시 32척으로 줄이며 사업 구조를 조정했다.

미 해군의 또 다른 사례로 꼽히는 DDG-1000(쥘왈트급 구축함) 역시 공동개발로 참여한 대형 함정 사업이다. 전기 추진체계, 신형 함형 설계 등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하는 과정에서 통합 관리의 어려움이 불거지면서 비용 증가와 일정

지연이 발생했고, 초기 계획했던 32척 건조는 결국 3척으로 축소됐다.

방산업계에서는 KDDX 역시 단일 국가 내에서 복수 조선소가 참여하는 구조인 만큼, 공동개발 방식이 선택될 경우에도 사업 관리 부담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본설계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후속 단계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만큼, 역할 분담과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한 업체가 사업을 독점하는 구조가 되면 국내 해양 방위산업 전반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며 “과거 장보고-Ⅲ 사업에서도 협력 설계 방식이 적용된 만큼 다양한 협업 시나리오를 검토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업 방식 논쟁이 아니라, 2년 가까이 지연된 사업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정책적 판단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김범석 불출석’ 논란 확산… 與, 4개 상임위 ‘쿠팡사태 청문회’ 연다

與 “국민기만”, 연석 청문회 추진
국토위·과방위·정무위·환노위 참여

개인정보 유출 책임 규명 착수
외국인 대표 답변 여론 악화
김범석 의장 출석 요구 커져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 및 각종 문제를 추궁하기 위한 ‘연석 청문회’를 추진한다. 지난 17일 청문회를 열었지만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한 데다, 책임있는 메시지도 나오지 않으면서 김 의장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는 모양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당 정책조정위원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 국토위·과방위·정무위·환노위가 같이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어제(17일) 과방위에서 쿠팡 관련 청문회를 했는데,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김범석 의장은 불출석하고, 언어가 안되는 사람이 출석해서 국민을 기만한 청문회였다”고 비판했다.

전날 과방위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를 열었지만, 정작 실질적인 책임자인 김 의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김범석 없는 김범석 청문회’냐는 비난이 일었다. 김범석 의장은 ‘170여개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자(CEO)로 공식 비즈니스 일정이 있다’는 사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미국 국적자인 김 의장은 미국에 체류 중이다. 쿠팡 한국법인 전 대표인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또 박대준 전 대표 후임으로 임명된 해럴드 로저스 신임 대표와 브렛 매티스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나와 통역사를 통해 “한국어를 전혀 못한다”거나 “장모님” 정도의 한국어만 한다”고 답해 ‘한국 국회를 조롱하냐’는 여론까지 나왔다.

게다가 로저스 대표는 “감사하게도 가장 민감한 정보인 결제 정보와 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대해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30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실질적 최고책임자는 끝내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참으로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실질적 책임자인 김 의장이 직접 나와 사과하고 재발방지책과 보상 방안을 제시해도 모자란데 말도 안 통하고 내용도 모르는 외국인(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을 내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뻔뻔함과 몰염치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 정무위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정무위, 국토교통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 등 연속 청문회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국토위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정무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상임위다. 과방위와 환노위를 중심으로는 쿠팡의 심야배송 문제, 노동자 산업재해 발생 문제, 퇴직금 문제까지 청문회에서 다룰 작정이다.

다만 정무위는 다른 3개 상임위와 달리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도 쿠팡에 관해 문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협조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황성업 신영증권 대표, 제7대 금투협회장 선출

결선투표서 57.36% 득표로 당선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41.81%

금융투자협회 신임 회장에 황성업 신영증권 대표가 당선됐다.

금융투자협회는 18일 정회원사 399개사 중 88.11%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총회에서 황 대표가 득표율 57.36%를 기록해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으로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는 41.81%를 얻었다.

이번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로 치러졌으며, 결선에서 황 대표가 이 전 대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뉴시스

황 신임 회장은 1963년생으로 휘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서 재무학 석사(MSF)를 취득했다. 1986년 대우전자에 입사하며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뒤 1987년 신영증권으로 자리를 옮겨 기획조사부, 법인영업, 투자은행(IB) 부문 등을 두루 거쳤다. 이후 자산운용본부장, 법인사업본부장, IB부문장, 부사장을 거쳐 현재 신영증권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황 회장은 금융투자협회의 역할을 ‘연결’로 정의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CEO는 ‘Connecting Executive Officer’,

사람을 연결하고 업계를 연결하고 미래를 연결하는 자리”라며 “금투협이 산업을 잇고 신뢰를 회복하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한국경제의 구조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도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은행 중심 구조로는 한국경제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며 “자본시장 중심의 대 전환을 위해 금융투자업계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리고 공감대를 넓혀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 언론과의 장기적 소통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투자업계의 파이를 키우는 것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韓, AI기술 자립이 국가 경쟁력 핵심”

대한상의, 배경훈 부총리 조찬간담회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미·중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빠른 추격과 전략적 접근이 향후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역시 미·중 사이에서 독자적인 AI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술 종속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 강연에서 “미국은 빅테크 중심으로 AI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중국은 소프트웨어상의 AI를 물리적인 세계로 끌어내리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20위권 AI 모델은 대부분 미국과 중국의 모델”이라며 “중국이 물리적 AI(피지컬 AI) 강국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현재 글로벌 AI 시장이 사실상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 상위 20위권 AI 모델 대부분이 양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아직 존재감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AI 모델을 다수 보유하고,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승용 기자